

김제시의회, 새만금 신항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촉구 “신항,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돼야”

전북자치도에 중립성 요구

새만금 신항의 운영 방식을 두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대립하는 가운데, 김제시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의 편파적인 태도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제시의회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항은 특정 지자체가 아닌 국가와 전북 전체의 발전을 위해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는 새만금 신항을 15번째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제시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를 뒤집고 해양수산부에 공식 의견으로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은 “전북도가 군산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정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이는 도민 전체의 이익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승경 경제도시위원장은 기자회견 문에서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을 ‘군산 새만금신항’이라 부르며 마치 군산항의 부속항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전북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역 이기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시가 반복적인 기자회견과 집회, 사발 및 단식 투쟁 등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목적이 깔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제시의회는 새만금 신항이 군산항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무역항으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장과 경제도시위원회 오승경 위원장을 포함한 김제시의원들이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새만금 신항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신항은 깊은 수심과 넓은 배후 부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물류 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국가 식품클러스터, 한국식품연구원,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등과 연계해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제시의회는 “군산시는 최근 동서도로 및 만경 7공구 관할권 논쟁에서 불리한 입장이 되자 새만금 신항을 차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공정성을 상실한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시의회는 △정부와 새만금 신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즉각 지정할 것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 △군산시는 사실 왜곡과 정치적 선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제시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도 새만금 신항의 공정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응해 나가겠

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장과 오승경 경제도시위원장 외에도 주상현·이병철·김주택·이정자·김영자·최승선·황배연·김승일·양운엽·문순자·전수관 의원 등 1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힘을 보태서 주목받았다.

한편, 26일 해양수산부 소회의실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등 3개 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신항의 항만 지정 관련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승진자리 만들기용’ 비별도 파견 제도 즉각 중단하라”

최형열 도의원, 인사 운영제도 개선 촉구

저출생 해결 위한 출생기본수당 도입도 제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7회 임시회에서 인사 운영제도 개선과 전북형 출생기본수당 도입 제안에 대한 정책질



의가 눈길을 끌었다. 최형열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전주5)이 25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의 인사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저출생 대책을 제안했

다. 최 의원은 먼저 ‘승진자리 만들기용’이라는 비판이 많은 비별도 파견 제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비별도 파견으로 인해 하위직 결원이 발생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

다. 또한, 하계올림픽 유치 전담 조직 구성으로 다수의 파견자를 복귀시킨 점을 언급하며 “전북도의 파견제도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외파견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전북도가 3개국 5곳에

해외파견을 보내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며, 연봉 외에도 수당으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외교류가 필요하다면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업무·언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선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 직속기관·사업소가 휴양지·유배지로 전락한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장년 1년 미만자를 관례적으로 직속기관에 배치하고, 징계 받은 직원들도 발령을 내 유배지로 불리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형 출생기본수당 도입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독일은 ‘킨더겔트’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남도 2025년부터 출생기본수당을 도입한다”며 전북도 역시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생기본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면 도내 아동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고, 교육·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저출생, 고령화, 인구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가 스포츠 강도(強道)로 거듭나길”

강동화 도의원, 도정 질문서 육성 종목 다양화 등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5일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육성종목의 다양화, 학교체육의 활성화, 우수선수 육성 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등을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이 쾌거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관광산업의 발전, 도민의 자긍심 고취 등에 기여할 것이며,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강 의원은 도지사에게는 △일반부 육성종목의 다양화·실업팀과의 진로 연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의 기능 활성화·적극 지원 강화 △학교체육 내 운동부 육성 시스템의 연계성 미흡(대학부)과 관련, 도청의 체육 정책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문했다.

그리고 교육감에게는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체육 육성종목의 다양화 △학교체육 내 운동부 육성 시스템의 연계성 미흡(초·중·고등학교)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강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체육회가 우수선수 발굴과 관련하여 육성·관리에 이르는 체계 속에서 상호유기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의미에서 전북 체육의 우수선수 육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기(國技)인 태권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목록 등재 요건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관심이 부족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고 관련 질문도 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도정질문을 통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스포츠 강도(強道)로서 자리매김하고 최종적으로 하계 올림픽 유치 및 개최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도정 질문을 마쳤다. /이만호 기자

“고압 송전선로 설치 관련 주민갈등 중재역할 나서야”

김만기 도의원, 도정질문서 김관영 도지사에 공식 요청… “상설적인 중재기구 운영을”

김 지사 “법을 상 정해진 도 역할 없어… 주민 의견 한전에 전달할 수 밖에” 입장 고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제417회 도정질문 서면질문을 통해 고압 송전선로 관련 주민갈등해결에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북자치도 곳곳을 지나는 고압 송전선로는 총 21개소, 627km에 달하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입지선정단계에서부터 심각한 주민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갈등 해결은 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듯 상황악만 할 뿐 중재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면서



어이없게도 한전 추진사업에 협력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설적인 갈등 중재기구 운영이나 갈등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추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은 첫째, 왜 수도권의 전력공급을 위해 지역이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제 아무리 국가전략망 구축이라는 명분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추진절차와 과정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해당 지역 주민과 지역의 의견수렴인데도 한전은 형식적인 대응과 최소한의 절차 이행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재생에너지의 수요는 수도권에 공급은 수도권 이하 지방에서 하더라도 최대 소비처인 기업들의 대대적인 지방이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상 송전선로 건설은 피할 수 없는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전북자치도가 한전과 주

민 간 중재역할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한전과의 협약에 대한 도민 우려를 고려해 협약 이행 과정에서 우리 도와 도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송전선로 건설 관련법 상 정해진 도 역할과 의무가 없으므로 그동안 했던 것처럼 주민들 의견을 한전에 전달하는 역할 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만기 의원은 “갈등해결에 나서달라는 주민 요청에는 관련법상 도의 역할과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한전과는 협약을 체결해 송전선로 건설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주민입장은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문하며 도 차원의 정책적 갈등해소 방안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용담댐 수상태양광 재추진과정서 주민수용 절차 미흡

국주영은 도의원 “5년 만에 조건부 수용으로 바뀐 사유 설명해야”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수상 태양광 재추진 과정에서 주민수용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절차를 통해 도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총구장 39배 규모’ (20MW) 연간 약 2만5,000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전북지방환경청은 용담댐을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등에 의견조치를 한 결과 6개 시군 모두 ‘상수원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 환경 당국 또한 6개 시군과 주민, 전문가가 참여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행여부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조건부 협의로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시설 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전북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조치 시 전북도 및 6개 시군은 △경관훼손, 상수원에 대한 불신 초래 우려 △수질 우려 및 안정성 확보 없이 사업추진 반대 △용담댐의 경우 전북도민의 80%, 138만명의 도민이 마시는 광역상수원으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됨을 강조하며 반대했고, 이후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중도 포기한 바 있다.

국주영은 도의원은 “지난 2019년 용담댐 수상 태양광 사업 반대 관점에서 5년이 지난 현재 개발 찬성 입장으로 전환한 명확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 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용담댐 광역상수원을 이용하는 6개 시군 전북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도 단 한 차례 없었으며, 전북도 차원의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요구했지만 신중한 접근이라는 부정적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수상태양광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만, 용담댐은 전북도민의 광역상수원인 만큼 수상태양광 설치의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며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안전성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73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현안업무보고 청취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영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놓여진 지역의 많은 학교가 문을 닫고 있고, 군산시 역시 올해 몇몇 초등학교가 통폐합되면서 현재 15개의 폐교가 있지만, 대부분 활용 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의 청렴도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운영, 대장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 풍당보리축제,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관련 등 주요 시정 현안 전반을 집중 질의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